

## 경제위기와 실업보험 재정관리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실업보험제도는 거시적으로 불황기에 총수요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완화시키면서 미시적으로 실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2008년 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모든 나라의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실업보험제도가 갖는 거시경제적 안정화 기능과 실업자의 생활안정 기능이 빛을 발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실업보험제도의 재정수지 악화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공통적 특징 외에도 각국의 실업보험제도의 차이에 따른 국가별 차이점 또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하고 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되자 수입을 증대하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활성화 조치를 좀더 강화하여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구직자가 약속한 면담 일시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급여 지급 중단조치를 강화하였다. 면담 불응 외에도 구직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의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급여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취해졌다. 수입 측면에서는 실업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부분적으로 증가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스웨덴의 경제위기는 실업급여 재정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06년 이전까지 스웨덴의 실업급여는 90%의 급여세와 10%의 실업보험기금 자체 보험료에 의해 유지되었으나 2006년 우파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업보험비용과 실업급여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후자의 자체 보험

료를 빠르게 인상시켰다. 실직위험 감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업보험 탈퇴가 증가하였는데 경제 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실업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탈퇴자의 실업급여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미국의 실업급여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급여액과 짧은 지급기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이 늘어나고 실업상태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장기실업과 이에 따른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실업보상 프로그램(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EUC)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EUC는 수급기간이 만료된 실업자에 대해 급여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써 첫 번째 연장에서 20주를 더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연장 신청에 의해 14주를 더 연장받을 수 있다. 또한 심각한 실업사태로 고통받는 주의 경우 최대 19주만큼 더 연장받을 수 있다. 2009년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에 의해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당 실업급여액을 인상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연방소득세를 면제하고 연장급여의 비용을 연방에서 부담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실업보험의 관대성 수준에 따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액과 장기간의 수급기간 제도를 갖추고 있는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실업의 증가로 인해 실업급여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며 상대적으로 장기실업자의 빈곤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재정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활성화 조치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재직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위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실업급여 수준이 낮고 단기간만 급여를 지급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재정수지 악화 문제보다는 실업 장기화에 따른 빈곤 문제와 사회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 재정을 투입하여 일시적으로 실업급여 수준을 높이고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업자 수의 증가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실업급여 지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적자 문제가 심각해졌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율로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

므로 보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급여액이나 수급기간, 나아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실업보험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사례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좀 더 완벽한 고용위기의 안전판으로 고용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KLI**